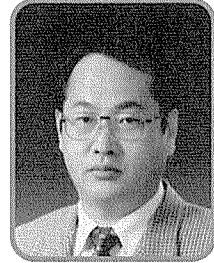


전자책, 전자책도서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미래



곽 동철*

도서관은 전자책(e-Book)을 하나의 새로운 도서관자료의 유형으로 수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수용 및 활용 비율도 확대일로에 있다. 이제 전자책, 전자책도서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머지않아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책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무선디지털도서관(WDL)의 상용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계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이와 관련된 기술의 통합을 요구하는 오류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즉, 전자책 판독기(뷰어, viewer)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DRM) 통합 논의의 오해, 산업 구조상 유통기술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자책 관련 기술들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저작권자를 배제한 전자책의 공동구매 등을 들 수 있다.

수 년 전에 화려하게 등장한 전자책 산업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침체를 겪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종이책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전자책이 단순히 종이책의 디지털화, 영구보관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최근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등장으로 전자책이 다시 한번 성장 및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전자책은 휴대전화나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제공되는 멀티북(m-Book)을 거쳐 복합단말기로 보는 유비쿼터스북(u-Book)으로 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측은 휴대전화, 소형텔레비전, 개인정보단말기,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의 역할을 융합하는 복합단말기의 생산 및 실용화를 통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전자책', '멀티북', '유비쿼터스북'을 총칭하여 '전자책'으로 표기를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기 발표한 유관 논문에서 사용하여 왔던 '전자도서'나 '전자도서전용도서관'이란 용어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책'과 '전자책도서관'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wackdc@chongju.ac.kr



도서관은 전자책 시장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전자책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 향후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저작자의 지적 창조물을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새로운 매체에 포장하여 유통하는 전자책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은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의 통합이나 공동구매 등과 같은 인위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보다는 일반 종이책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시장을 자율적 성장에 맡겨야 한다. 이는 전자책 회사가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자료를 생산하는 출판사 또는 서점으로서 도서관과 동반자의 관계 속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다. 즉, 이를 위해 도서관이나 전자책 회사는 함께 전자책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도서관은 전자책 산업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을 그 회사가 아닌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전자책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인 저작권자가 언급되지 않고, 일부 저작권자이면서 유통·서비스 회사들이 산업의 중심으로 논의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도서관은 전자책 산업의 실질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작권자(저자,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즉, 도서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지 못한 전자책 회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 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나아가 저작권자라는 주인공을 배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은 전자책 회사들의 유통플랫폼이 아닌 저작물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책의 유통플랫폼은 저작물에 종속되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와 그 유통회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은 이러한 전자책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책 회사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욱 훌륭한 양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 등의 B2B 시장은 저작물의 가격에 대한 정책적 개입보다는, 기본적인 임무인 이용자 서비스와 각 기관별 양서의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전자책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혼란은 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 등 기관 시장의 구매 보류와 예산집행 정지 등과 같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책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우리의 문화유산이요 지식정보자원인 저작물의 생산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현재 전자책 회사가 전자책의 문서를 만들고 파일변환까지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작도구의 배포를 통해 전자책의 문서작성은 저작권자 쪽에서 맡게 되고, 전자책 회사에서는 파일변환 작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영역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표준 전자책 제작도구(피블리셔)와 기존 데

이터 변환기술(컨버터)의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즉, 전자책의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플랫폼(솔루션)의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국가적으로 제정한 전자책 표준에 의해 전자책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의 통합 및 공동 개발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전자책의 표준을 정착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전자책의 제작은 표준화하고, 그 유통 및 서비스는 개별화하면서, 전자책에 대한 해킹 등 저작권보호 관련사항은 전자책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차원이건 기관차원이건 간에 전자책도서관 플랫폼을 개발하여, 그 개발된 플랫폼과 판독기에 맞춰 전자책의 공급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플랫폼의 통일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 때부터 전자책회사의 실질적인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저작물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져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다.

여섯째,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많은 부문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책 산업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지금도 이용자들은 개인컴퓨터, 전자책전용단말기, 개인휴대용단말기,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책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이용자들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책 회사 또는 출판사는 전자책을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매체를 인식하고 기획·제작·유통의 전문화와 다른 분야와의 사업연계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면서 동시에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법적 장치들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은 전자책이 하나의 도서관자료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들은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책의 가독력 향상, 문서포맷의 표준화, 고성능 판독기 개발,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상기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은 우수한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 저작자들이 보다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지식정보사회에서 교부가가치를 지닌 일종의 문화콘텐츠산업인 전자책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